

정치 국방·북한

정부, 대북 빗장 이제 풀려나

등록 : 2011-06-29 08:24

경협사업자 복접촉 승인...금강산에 당국자 파견
천안함-비핵회담 분리도...태도 변화 가능성 보여

정부가 5·24 조처 이후 처음으로 경협사업자의 북한 인사 접촉을 승인하는 등 최근 대북 제스처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경협업체인 태림산업 관계자들이 24일부터 사흘간 정부의 승인을 받고 개성을 방문해 북쪽 사업파트너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인사들을 만나 현장 설비 등을 점검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태림산업은 2006년 9월 개성 인근에 295만달러를 투자해 석재공장을 세운 뒤 운영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경협·교류를 제한한 5·24 조처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의 지역에 투자한 경협 및 위탁가공업체 관계자들의 북쪽 인사 면담과 현장 방문을 불허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사업자가 투자자산의 상태 등을 살펴보겠다고 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5·24 조처 완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협사업자 등이 투자자산 보호와 관련해 제3국 등에서 북쪽 사업자를 만나겠다고 하면 사안별로 검토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9일 북쪽의 금강산 재산 정리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북쪽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 당국자를 금강산에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외교장관 회의 뒤 비핵화 남북회담의 경우 북쪽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북한의 남북비밀접촉 폭로 이후 가파르게 치달던 남북 대결국면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던지는 모양새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남쪽의 남북대화 우선론에 동의하면서도 남쪽 정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직접 만나 제대로 얘기할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실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알리바이용으로 대화 제스처를 취한다면, 결국 다시 엇박자만 내고 말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남쪽 당국과 더이상 상충하지 않겠다”던 북한은 25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진정 대화를 원하면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며 일단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8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회담의 분리와 관련해 “내외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라며 진의에 의구심을 내보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추진하느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